

HMM 누구 품에... 피크아웃 우려에도 민영화 관심 집중

〈고점 후 하락〉

지난해 '초알짜 30-30 클럽' 저력 업계 불황 전망에 하향안정화 주장 정부, 단계적 매각 언급... 후보 없어



HMM 누리호의 모습

/HMM

고점을 달리던 해운운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3000선이 붕괴됐다. 이에 운임지수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맞았던 HMM의 피크아웃(고점 후 하락)도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시장의 관심은 'HMM의 민영화'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4월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살펴보면 2847.62포인트(2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전주보다 306.64포인트 내린 값으로 12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SCFI가 3000선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23일 2979.76포인트 이후 500일(16개월) 만이다. 더군다나 해운운임이 떨어지는 폭도 가팔라 한 주 만에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해운업계의 '호시절'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HMM의 호황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영업이익률(영업익률)과 당기순이익률(순이익률)도 동시에 30%가 넘는 '초알짜 30-30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여줬다. '초알짜 30-30 클럽' 분

석은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올해 국내 매출 2천 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HMM은 해당 기업 중에서도 매출 10조 원이 넘는 유일한 기업이 됐다.

통상적으로 제조 및 서비스 업체 등에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군으로 보고 있는데, HMM의 부채비율도 70.9%로 재무건전성도 양호했다. 그만큼 부채보다 자본을 많이 모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운임 하락세가 뚜렷해 보이는 하지만 2010년경 1500대에 머물러있던 해운운임 가격은 '치킨게임'의 결과"라며 "해운업계가 경기 따라 진폭이 넓은 산업이라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

지만 '해운 치킨게임' 시절에 달하는 저운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향안정화'를 주장하는 셈이다.

오히려 시장 이목은 피크아웃과 하향안정화에 대한 이슈보다 HMM 매각에 쏠리고 있다. 업황 하락 예측 속에서도 누가 민영화를 통해 '알짜기업 HMM'

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현재 HMM 1대 주주는 KDB산업은행으로 20.69%를 가지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이 19.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둘이 보유하고 있는 HMM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은 70%에 육박한다. SM그룹이 5.52%를 확보해 3대 주주로 언급되긴 하지만 SM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현 수장인 김경배 HMM 사장이 현대글로벌 출신이기에 잠정적 인수 후보군에 들어가고, 물류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유력 매각 후보로 언급되지만 인수를 위한 작업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은 해운 환경을 배경으로 HMM을 민영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인 매각'을 언급할 뿐이고, 마땅한 매각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HMM은 내년 10월 25일부터 2조68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조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10% 수준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산은과 해진공이 해당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HMM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 과제는 남아있지만 HMM은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선복량을 120만 TEU(현재 82만 TEU) 규모로 확대하고, 벌크 선대를 55척(현재 29척)으로 90% 확장하며 중장기 전략을 밝혔다. 또 올해부터 5년간은 선박, 터미널, 물류시설 등 핵심자산을 중심으로 1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高환율 단기 해소 어려워 법인세 등 정책대응 시급”

상의 '환율 상승 현황·평가' 보고서 기업 부담 증가... 투자 위축 우려 지적 "고비용 부담 완화 대책 적기 시행되어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高)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 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美 연준은 금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렀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

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어야"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2022 정기 고연전: 2022.10.28(금) ~ 10.29(토)

고대의 열정으로 세상을 움직여라

대체불가능한 고대다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KOREA UNIVERSITY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2. 9. 13 (화) ~ 9. 15 (목)
- 세종캠퍼스 : 2022. 9. 13 (화) ~ 9. 17 (토)
- 접수처 : oku.korea.ac.kr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